

1.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7월 2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1년 7월 5일

○ 상정일자 :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7월 15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 이와 연계하여 조례명, 추진체계,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데이터 수집, 공동활용, 분석 등 데이터기반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

##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총 25조로 구성되었던 조례를 총칙, 추진체계, 데이터기반 행정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의 4장 22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위원회, 빅데이터 책임관 등의 추진체계 명칭을 데이터기반 행정 위원회,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등으로 변경하고,
- 데이터 활용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등록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관리 부서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유공자에 대해 포상하고자 함.
-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빅데이터 활용 촉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조례를 유지하였음.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 이 개정 조례안은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20.12.10.)에 따라 시정전반에 걸친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먼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며,  
예를 들자면 112 신고데이터, 범죄통계 데이터,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하여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한정된 치안자원(경찰인력, 순찰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바로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음.
-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책수립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을 포함한  
 전면 개정 추진으로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이 조례안은 본칙 4개장 22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명을 개정 조례의 목적에 따라 변경하였음.
  - (현 행)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개 정)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 ~ 안 제3조)에서는 법에 따라 조례의 입안 목적, 용어의 정의, 대구광역시장의 책무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1조는 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를 법에 따라 정의 하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의는 현행 조례를 따랐음.
  - 안 제3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 **안 제2장 추진체계(안 제4조 ~ 안 제10조)**에서는 데이터기반 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의 빅데이터위원회를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로 전환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현행 빅데이터위원회의 구성 등을 동일하게 따랐음.
  -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지정과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인력확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정책 현안, 협업방안, 발전방향을 논의토록 하였음.
- ▶ **안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안 제11조 ~ 안 제16조)**에서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기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기반 시스템을 대체·운영토록 하고,
  -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요청 및 제공과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각 공공기관과 데이터 활용기반 시스템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 보유함에 따른 데이터 현행화 보장 방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내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의 데이터기반활성화 사업추진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와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4장 빅데이터 활용(안 제17조 ~ 안 제21조)**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사업 추진과 빅데이터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빅데이터의 원활한 제공을 촉진토록 하였음.

-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현행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동일하며,
- **안 제20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21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상위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경우 그 절차와 조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22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 안 부칙(안 제1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행 조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전부 개정안은 국민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와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음.
- ▶ 다만,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처벌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조건 등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임.

##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고

## 타시도 데이터관련 조례 현황

(2021. 07월 현재)

구 분	조 례 명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 자 치 시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도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	
경상북도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